

# 홍준표 “호남에 대한 애정 계속할 것”

전북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 “새만금 문제는 당 차원에서 별도로 세우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17일, 전북 도당 당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신년에서 “원래 호남지역은 한국 보수세력의 뿌리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5천년 가난을 벗어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던 민주공화당 뿌리가 호남이었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영호남으로 갈라섰다”며, “우리당에 불모지가 된 30년이 훨씬 지났다. 1% 지지가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저희 당이 호남에 대한 애정은 계속 할 것을 우리 호남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80년대 초 1년 6개월 동안 부안읍 동중리에서 살았고 90년 대 초에는 1년 4 개월 동안 광주시민이었다”며 호남과의 인연을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송하진 전북지사와 공부도 같이 한 대학 동기다”며, “예전 예산 국회에서 전북 캠비리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송하진 지사에게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전북의 발전은 새만금”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전북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5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홍콩 방식으로 새만금을 100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만금은 현재의 방식으로 매년 나라에서 짤막질을 주는 예산 방식으로는 새만



17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2018 호남권 신년 인사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전북지역 당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제공)

금을 개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봐도 미지막 남은 4차 산업혁명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이다”며, “새만금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가 일어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호남의 중심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회가 있으면 새만금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별도로 세우도록 오늘 약속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정부, ‘상향식’ 정부혁신 본격 추진

정부가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내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국민체감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한 뒤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 ‘민주-평화-개혁’ 지향 신당 창당 본격 나서

### 혁신당창당추진위, 창당결의대회 열어… “보수적폐세력과의 야합에 반대”

안철수 대표의 보수우경화 힘탕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모임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위원장 조배숙 의원) 17일, 전주교대에서 ‘개혁신당 창당결의대회’를 열고 ‘민주-평화-개혁’을 지향하는 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대회에는 조배숙, 정동영, 유태엽, 김종회,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의원, 지방의원, 대표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당의 정당정신을 외면한 채 보수적폐세력에 당을 송두리째 현납 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폭거와 비민주성을 성토하며 당시 나이가 길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창추위는 민주·평화·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종결짓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 원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경제민주화 완성,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다양제 합의정치 정착 등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안 대표가 ‘대표당원 정리’에 나서고 전당대회를 권역별로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괴망측한 짐수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불법 전당대회를 무산시켜 안 대표의 이욕을 저지할 생각이지만, 민일 안 대표가 끝내 전대를 폭력적 방법으로 밀어붙인다면 개혁신당을 창당해 다양제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적폐청산·남북협력·평화·개혁·공존의 신념으로 국민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장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및 출자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자치보급	5,733,677,999
...	
66 참여해주시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추미애 “MB, 실체적 진실 고백해야”

네이버에 악성댓글 관리 강화 촉구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비자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비자금 (마후애)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고 진술을 비판을 언급하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국민의 질문은 단순히 소유자 누구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다”며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뇌물 불법 증여, 부정 죽재라는 적폐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국민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렵사리 만든 평화올림픽 기회를 무책임한 이념신동,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보수 야당 행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비중도 환영하는 남북대화를 보수이념이 이루성치며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꿀 못 보겠다면 대단히 유치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문슬람’ 발언에 대해서는 “나라를 휘둘하고 비하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해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찌뉴스 유포를 엄중 처벌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관계당국도 사회신뢰를 불교시키는 악성댓글을 방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펠트 사업자인 네이버를 지목해 “네이버는 자사서비스에 이런 행위(악성댓글)가 범람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인도 방조도 공범이다. 사회를 좀 먹는 악성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 조배숙, ‘가맹사업 진흥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은 17일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그동안 협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왔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면서 업무 이관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며 그 평가 결과를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도록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산임위에 제출하는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검증을 거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면현진구)

홍보대사 류수영